



---

이슈브리프  
**ISSUE BRIEF**

---

발행일 : 2020년 11월 26일 (목)

**CONTENTS**

- 해외 석학들이 본 바이든 新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전망
- 스타트업 해외 성공사례 분석 및 시사점
- 음식배달 라이더 현황 및 업계 건의 사항



# 이슈브리프

(IB 2020-14)

---

## CONTENTS

I. 해외 석학들이 본 바이든 新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전망 / 1

II. 스타트업 해외 성공사례 분석 및 시사점 / 13

III. 음식배달 라이더 현황 및 업계 건의 사항 / 23

---

발행인: 지상욱

편집인: 김창배

편집위원: 임춘건, 이윤식, 나경태

편집간사: 김진솔

발행일: 2020년 11월 26일

발행처: 여의도연구원

인쇄: 디엔시파크



# Contents\_

금주(11월 4째주)는 바이든 외교안보정책, 스타트업 해외사례, 배달라이더업계 실태 등 3편의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제1편에서는 세계 석학들이 전망한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중국·대북정책, 동맹관 등 외교안보정책 전반에 대해 검토·분석했습니다. 제2편에서는 주요국가 스타트업 성공사례를 분석, 국내 스타트업 진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제3편에서는 배달 라이더들이 겪고 있는 업계 실태를 진단, 보호정책 마련 등 업계 건의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 제1편: 해외 석학들이 본 바이든 新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전망 (이인배 외교통일정책실장)

세계 석학들의 분석을 통해 바이든 신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전망하고자 함. 바이든 신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기조는 “다자주의에 기초한 대중 압박전략”이 될 것인데, 중국에 대해서 3C(△Cooperation: 협력, △Competition: 경쟁, △Confrontation: 대치) 정책이 혼합된 ‘선택적 대결정책’을 취할 것으로 보임. 특히, 전문가들은 북한이 과거와 달리 미국 신정부 출범 시기에 맞춰 도발이 아닌 대화와 협상 등 다른 방식을 취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발맞추어 바이든 신정부도 지속적 대북 대화 의지를 표명하며 상황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진단

## 제2편: 스타트업 해외 성공사례 분석 및 시사점 (전규열 폴리뉴스 정치경제국장)

국내 스타트업 투자가 정부 지원정책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민간 스타트업 육성과 생태계 구축은 여전히 답보 상태. 반면, 주요국들은 △규제완화, △금융지원, △세제혜택, △실패를 용인하는 ‘다브카’ 문화, △글로벌 VC와 글로벌 IT기업 유치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성공사례를 축적해 가고 있음. 특히 민간투자가 활성화된 미국과 중국 등이 창업환경개선과 멘토링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필요. 인센티브 다각화, 세금감면 등 민간자본 유치환경을 개선하고 글로벌 VC와 글로벌 IT기업 투자자의 국내 유인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함

## 제3편: 음식배달 라이더 현황 및 업계 건의 사항 (이영주 라이더유니온 정책국장)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배달 확산으로 외식업과 음식배달업의 성장은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음식을 배달하는 라이더들은 열악한 처우와 사고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음. 고용형태 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위로 인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전반의 미비로 인해 유상운송보험 역시 가입하기 힘든 상태임. 이에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및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정비 등 적극적 보호 정책이 필요함



# 1. 해외 석학들이 본 바이든 新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전망1)

작성: 이인배 외교통일정책실장 (lee.in.bae@ydi.or.kr)

세계 석학들의 분석을 통해 바이든 신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전망하고자 함. 바이든 신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기조는 “다자주의에 기초한 대중 압박전략”이 될 것인데, 중국에 대해서 3C(△Cooperation: 협력, △Competition: 경쟁, △Confrontation: 대치) 정책이 혼합된 ‘선택적 대결정책’을 취할 것으로 보임. 특히, 전문가들은 북한이 과거와 달리 미국 신정부 출범 시기에 맞춰 도발이 아닌 대화와 협상 등 다른 방식을 취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발맞추어 바이든 신정부도 지속적 대북 대화 의지를 표명하며 상황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진단

## 1. 美 대선 이후, 미국 정세: 초당적 리더십의 필요

- 바이든 신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감염 확산 차단 및 감염자 관리에 최우선을 둘 수밖에 없을 것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 바이든 신정부에게는 산적한 과제가 너무 많아, 북한 이슈는 후순위가 될 것임. 이번 인수위에서도 국내문제가 중심이 되었음 (빅터 차 前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 코로나-19는 민주주의의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 등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음. 민주주의 핵심가치인 자유와 인권의 제도화를 강화하고 미국의 저력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됨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1) 본 보고서는 『조선일보』에서 주최한 “아시안리더십컴퍼런스(ALC)”에 참가한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한 것임

- 이번 선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美 국민들의 거부였지만, 그가 추진한 정책기조, 즉 “트럼프즘(Trumpism)”을 거부한 것은 아님 (수미 테리 CSIS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
  - 트럼프 지지표는 7300만표로 역대 득표 중 가장 많았음
  - 단, 트럼프즘은 불문율을 파기하고 미국 내 정치 분열과 양극화를 심화
  - 만약 공화당이 상원을 지속 장악하게 될 경우, 코로나-19, 기후변화 대응 등 신정부의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어려울 수 있음
- 결국, 신정부는 정치적·경제적 양극화 문제 해결이란 어려운 과제를 떠안게 된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

## 2. 신정부의 아·태지역 정책: 새로운 아시아 회귀정책

- 국내정책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최고의 대외정책은 국내 과제들을 잘 챙겨서 강력한 미국을 만들고, 이를 통해 경쟁국들에게 미국의 저력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중요 (빅터 차)
- 신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모든 대외정책을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트럼프 정부에서 구축해 놓은 일본, 호주, 인도와의 다자적 네트워크는 향후 국제질서 유지에 중요한 기틀이 될 것임 (커트 캠블 前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 전통적으로 유럽에서 추진한 친밀한 관계를 통한 외교정책을 일본, 호주, 인도 등에도 적용하여, 지도자간 개인적 유대를 통한 안정적 외교관계를 구축해왔음



- 이러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다음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오바마 정부 시절 ‘아시아 회귀정책(Pivot to Asia)’이나 ‘재균형 정책(Rebalancing)’ 이상으로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로 국제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시아 국가들도 코로나-19 이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음. 따라서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 (키트 캠블)
  - 트럼프 정부는 ‘통상 불균형 문제’ 등을 제기하며 아시아가 미국의 발전을 발목 잡는다면 인식이 강했지만, 신정부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
- 트럼프 정부 시기 ‘아시아 중시 정책(인·태전략)’의 핵심 목표가 부상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도 유사한 정책을 취할 것 (수미 테리)
  - 2020년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인도·태평양 정책 용어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상 중국을 전략적 경쟁대상국으로 간주하며, 홍콩 사태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 어필할 것
- NATO 같은 안보체계가 아시아에 들어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 특히 쿼드(Quad)가 군사적 동맹 성격이 강했지만, 정치적 대화에 머물러 있어서 실질적 진전은 없었음 (수미 테리)
  - 구조적으로 대만, 베트남, 한국 등이 미국의 쿼드(Quad) 합류 요청에 응할지도 미지수

### 3. 바이든의 중국 정책: 3C(협력, 경쟁, 대치)의 혼합 정책

- 대부분 학자들은 중국이 평화와 번영시대를 저해하고 민족주의적 대외정책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바이든 신정부는 동맹과 연합해서 중국을 다룰 것으로 전망
  - 오바마 정부 시기에는 해군력 향상이 미비해서 현실적으로 자유 항해 작전 등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음. 보다 적극적으로 인·태지역에서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적극적 개입 정책을 추진할 것 (브루스 클링너)
- 상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중국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를 주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과의 경쟁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 (커트 캠블)
- 전문가 대다수는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정책은 지속될 것이나 강도와 스타일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중국과 바이든 신정부와의 관계는 3C로 협력(Cooperation), 경쟁(Competition), 대치(Confrontation)가 혼합될 것 (조셉 윤 前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 협력분야: 보건, 기후변화, 북한 문제 등
    - 경쟁분야: 경제 통상, 5G 등
    - 대치분야: 남중국해, 인권문제 등
  - 중국 대응에 있어서 인권문제가 부각될 것이지만, 미국과 중국 간 이해가 맞는 부분은 협력할 것으로 전망 (랜들 슈라이버 前 미 국무부 인도 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 트럼프는 중국과 이해관계가 합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협력하지 않으며 오로지 공산국가를 적대하기만 했고, 이로 인하여 북한 문제에도 중국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견해도 있는 바,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간 협력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 (조나단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신정부 간의 대중 정책에 대한 근본적 차이
  -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봉쇄’하고자 했다면, 바이든은 중국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이 될 것. 따라서 바이든 신정부는 중국을 세계에서 디커플링하기 보다 미국의 경쟁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둘 것 (김성한 前 외교부 차관)
  -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일관된 전략적 목표가 부재했고 그 결과 동맹관계를 약화시키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엇박자가 발생했던 바, 바이든 신정부는 현실적이면서 정교한 대중정책을 통해 군사갈등을 피하면서도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 (조나단 폴락)

#### 4. 바이든의 동맹관: 한반도를 넘어선 협력 관계 추구

-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정책은 일방적, 강압적 모습을 보였음
  - 쿼드+ 구상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편가르기를 시도했으나, 아시아 국가들은 군사는 미국에 의지하면서도, 무역관계는 중국에 의지하는 양면적 입장을 유지하고자 함 (브루스 클링너)

- 미국은 한국이 중국 억제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사실 명확한 입장 취하기 어려웠음 (수미 테리)
- 향후 한미동맹은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나가기 위해 한반도를 넘어선 안보 틀에서 '새로운 이익'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스티브 비건)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협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미동맹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범위에서 협력하는 것도 중요 (랜들 슈라이버)
-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대부분 학자들이 전망
  - 한·미간 협상을 통해 이미 합의된 것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토함으로써 해결되지 않았음. 따라서 바이든 신정부 출범 이후 협상이 빠르게 진전될 것 (마크 리퍼트 前 주한미국 대사)
  - 한·미 동맹관계가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 (수미 테리)
  - 바이든 신정부는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국 및 북한 문제를 대응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의견 조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김성한)
- 향후 한미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서 미군 주둔비용 부담 같은 국지적인 문제보다, 미군의 근본적인 목적에 주목해야 할 것을 주문 (마이클 오헨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 한미연합작전은 상호호혜적 영역인 바, 한·미의 기술적 개선을 통해 북한 핵무기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미사일 방위 능력 향상에 주력할 필요
  - 또한, 향후 새로운 의제들 즉 사이버 안보,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과 관련하여 새로운 협력이 필요할 것 (마크 리퍼트)
- 많은 석학들이 동맹문제에 있어서 현안은 한일관계로 보고 있으며, 한·일관계 회복이 중국 문제와 북한 문제 해결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
- 한일갈등으로 중국에 대한 대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바이든 신정부는 양국 관계에 조금이라도 압박을 가해서 한일관계 진전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음 (커트 캠블)
  - 한·일간의 상향식 커뮤니케이션이었지만, 앞으로 탑다운 방식의 대화를 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커트 캠블)
  - 한일관계는 양국 지도자가 너무 표심을 의식해서 정치적 문제가 되었음. 이 때문에 트럼프 정부도 더이상 개입하지 못한 것. 바이든 신정부는 한·미·일 3자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일관계를 개선할 것으로 전망 (조셉 윤)

## 5. 바이든의 대북정책: 한·미·일 공조로 북핵+인권 동시압박

- 트럼프 행정부의 유산은 진실이 명확히 드러났다는 점임 (에반스 리비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 정상회담 쇼와 비핵화에 대한 환상뿐이었으며, 미·북간 비핵화 합의가 나왔지만 아무도 신뢰하지 않음

- 김정은 위원장은 주요 핵시설을 은닉하려는 시도만 보이고, '핵/ICBM 실험 중단 + 핵활동 눈감아주기'라는 미·북간 신사협정만 있었을 뿐임
- 향후 미·북 협상에 대해 대부분 학자들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 보다 정상적으로 차근차근 접근하게 될 것으로 전망
  - 뒤로 가지는 않을 것이고, 쇼도 없고, 전략적 인내도 없을 것임. 명확한 것은 동맹과의 조율을 통해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임 (크리스토퍼 힐 前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 김정은과 트럼프의 브로맨스는 더이상 없을 것. 즉 깡패, 독재자에 대해 다정하게 대하는 미국 대통령의 모습도 없을 것 (브루스 클링너)
  - 관련 국가 중 바이든만 새로운 인물.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임. 지금까지 모든 노력은 다했음(6자, 4자, 장관급, 정상급 등등). 김정은 위원장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음 (랜들 슈라이버)
-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지식이 없는 채 취임했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외교에 많은 경험이 있고, 북핵 협상에 관여해 본 적도 있다는 점에서 차이 (조셉 윤)
- 실무협상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오바마 정부와 유사할 것.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단계적 비핵화' 추구 가능성이 높음 (수미 테리)
  - 핵물질 생산 동결 및 추가생산 상한선 설정, 영변시설 폐쇄에 대한 부분적 또는 전면적 제재 완화 여부 문제가 중요할 것
  - 북한도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신뢰를 보여야 하는데, 우선 모든 핵 시설을 공개하고 사찰을 받아야 함

- 바이든이 정상회담을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전제조건이 필요. 정상 회담 전에 사전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 (빅터 차)
  - 실무 전문가 차원의 외교가 추진될 것인데, 핵심은 '검증' 가능성 문제임. 트럼프는 본인의 얼굴을 걸고 올인했지만 성과는 없었음. 미국은 디테일을 간과했고, 북한은 수십년 기다린 기회를 날려버린 것
-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위한 첫 단추와 마지막 단추는 결국 중국과의 협력이라는 것을 바이든 신정부는 잘 알고 있기에 대북관계와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해 중국과 협조에 심혈을 기울일 것 (에드윈 풀러 헤리티지재단 창립자)
- 바이든 당선인은 외교위원장을 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인 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분주하게 찾아갈 것 (에드윈 풀러)
  - 인권 특사를 임명하는 상징적 조치부터 시작할지 여부도 주목해 봐야 할 것
  - 바이든 당선인은 인권에 관심이 많고, 야당이 된 공화당도 여당 때와는 달리 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것 (조셉 윤)
- 대북 제재가 충분히 발휘되는 환경에서는 대북지원이 대화에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인 바,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개입 (engagement) 정책이 필요함 (마크 리퍼트)

## 6. 북한의 도발 가능성

-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
  - 미국의 신정부 출범을 전후로 북한의 도발이 있었음. 특히 트럼프가 재선하지 못하고, 바이든이 등장했기 때문에 도발 가능성이 더 높아짐. 이는 신정부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한 것 (빅터 차)
  - 다만, 현재 북한도 매우 조급한 상황이어서, 과거와는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음 (빅터 차)
  - 북한은 핵실험이나 미사일로 미국 신정부를 맞이해 왔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식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왜냐하면 북한도 도발로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 (조셉 윤)
- 북한의 행보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은 자신의 스케줄과 행동원칙에 따라 움직이면 될 것. 북한이 연말이나 연초에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이 지속적으로 대화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사전에 전달할 필요가 있음 (스티브 비건)
  - 바이든 신정부는 북한이 도발한다면 보다 강경한 대응을 할 것 (수미 테리)
  - 미국은 국방비 긴축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슈라이버)
- 북한의 도발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북한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를 취할 것을 주문



-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태도에 따라 북한도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것. 지속적인 압박만 하는 과거의 모습에서 다른 방법을 보일 필요가 있음. 압박을 한다고 해도 중국, 한국, 러시아 등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충분하지도 않았음. 따라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려면 다른 접근도 필요 (조셉 윤)
- 2021년에는 대북협상의 기회가 커질 것. 내년엔 기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특사를 보내는 것도 필요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미·북 정부 관료 간에 협력적 토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북한에게 최고의 협상 특사단을 파견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야 함 (에반스 리비어)
- 북한은 마냥 기다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각적 외교가 필요 (크리스토퍼 힐)

## ○ 통상부문 현상 평가

- 국제사회에서 일반 국가들의 무역의존도는 60% 정도. 북한의 경우, 2014년과 2015년 자료를 기준으로 5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이는 북한 경제가 거의 개방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 제재에 취약함을 보여주는 것
- 북한의 수출규모가 2013년을 100으로 삼을 때, 2019년에는 유엔제재로 10 수준으로 급감. 그리고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시 2, 3 수준으로 떨어져 북한의 수출 규모가 99% 감소한 것으로 보임.
- 밀무역으로 어느 정도 보충했을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수출규모 60~70%는 사라진 것으로 보아야 함

## ○ 북한의 외화소득 규모 추정

- 북한 주민 개인들도 외화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필요한 외화를 모두 동원할 수 없는 상황
- 현재 북한의 외화보유고는 25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는데, 매년 무역 적자가 30억불 정도를 버텨내기 위해서는 수단으로 외화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
- 제재의 허점 중 핵심은 사이버 해킹, 중국으로부터의 관광객 수입, 북한 공해의 이용권 판매 등
- 현재 상황에서 제재의 허점을 봉쇄한다면 수년 내 북한 외화가 완전 고갈될 것인데, 이러한 상황이면 식량, 에너지, 소비재를 수입할 수 없고, 로얄패밀리의 사치품도 살 수 없게 될 것임

## ○ 북한의 시장 상황 평가

- 시장활동을 통해 북한 가구들이 생활할 수 있었는데, 유엔제재로 구매력이 감소하고 소비재 수입도 감소해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시장활동을 통한 수입도 줄어들고 있는데, 탈북민 설문에 의하면, 제재를 기점으로 소득변화는 25%가 축소
- 소득 십분위에서 상위 10%, 하위 10%가 가장 충격이 컸음

## ○ 산업 부문 상황 평가

- 원자재와 자본재의 수입은 제재 이후에도 중국으로부터 이어졌음. 이로써 무역적자는 발생했지만, 산업 부문이 작동할 수 있었음
- 그런데 코로나-19로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완전 봉쇄되며 산업 부문에서도 충격 발생
- 2017년, 2018년 경제성장률이 -3, -4% 정도였다면, 2020년은 -5~-10% 성장률 기록할 것으로 전망. 그 결과 2018년부터 북한 GDP는 17~20% 감소

☞ 결론적으로 제재가 북한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조치로 판정이 난 것임. 즉, 제재가 김정은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 낸 것

## II. 스타트업 해외 성공사례 분석 및 시사점

작성: 전규열 폴리뉴스 정치경제국장 (jky9618@hanmail.net)

국내 스타트업 투자가 정부 지원정책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민간 스타트업 육성과 생태계 구축은 여전히 답보 상태. 반면, 주요국들은 △규제완화, △금융지원, △세제혜택, △실패를 용인하는 ‘다브카’ 문화, △글로벌 VC와 글로벌 IT기업 유치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성공사례를 축적해 가고 있음. 특히 민간투자가 활성화된 미국과 중국 등이 창업환경개선과 멘토링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필요. 인센티브 다각화, 세금감면 등 민간자본 유치환경을 개선하고 글로벌 VC와 글로벌 IT기업 투자자의 국내 유인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함

### 1. 논의의 배경

- 정부는 각종 지원정책을 통해 스타트업 육성 및 생태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나, 스타트업 투자는 여전히 민간보다 정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 한편, 해외 주요국은 민간투자 활성화, 스타트업 진작 정책 등을 통해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전개
  - 최근 중국, 싱가포르 등에서 스타트업 증가로 전 세계 투자금액 중 아시아 투자 비중이 (2012년) 11.5% → (2018년) 39.1%로 증가
  - 유럽은 EU 차원에서 스타트업 보조금, 투자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개별 국가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제공
- 스타트업 활성화는 국내 기술력, 아이디어, 시장 경쟁력과 직결되는 바, 본고는 해외 스타트업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2. 해외 스타트업 성공사례

### ① 아시아

#### ① 중국

- 2014년 9월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대중창업을 장려하는 ‘대중창업, 만민혁신’ 강조하며 시작
  - 창업을 위한 각종 서류를 사업자 등록증 하나로 통일한 ‘다중합일’ 제도 통해 행정규제를 축소 및 철폐
  - 창업자금 조달 돕기위해 기술기반 스타트업이 거래할 수 있는 장외거래 시장인 ‘신삼판’을 2013년 전국의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청년층 중심의 창업지원 플랫폼 ‘중창공간’도 전국적으로 확대
  - 알리바바의 마윈과 같은 창업에 성공한 모델이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킴
- 개인투자자나 벤처캐피털 투자액의 70% 세제혜택 제공
- 벤처투자자의 투자금 회수기간을 일컫는 ‘엑시트(Exit) 기간’이 4년으로 미국의 7년보다 더 짧음

#### ② 싱가포르

- 돈·인재·네트워크 삼박자를 고루 갖춘 나라
  - 2008년 ‘혁신과 기업을 위한 기초사업’을 계기로 싱가포르의 금융 및 MICE 산업에 스타트업이 가세
    - ※ MICE 산업: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 네 분야를 일컫는 서비스 산업

- 금융 선진국답게 초기에는 스타트업 자금지원을 위한 벤처캐피탈 육성에 역점. 이스라엘과 실리콘밸리의 벤처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벤처캐피탈의 투자금과 동일한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1:1매칭 펀드 실시
- 정부의 다양한 스타트업 친화적 정책 추진
  - 스타트업에 투자할 자금지원을 돕기 위해 ‘Early Stage Venture Fund’를 설립, RIE2020(Research Innovation Enterprise 2020) 계획을 발표하며 4년에 걸쳐 연구개발 투자에 190억 싱가포르 달러 투입
  - 아이디어만 있는 신생 기업 돕기 위해 스타트업SG를 설립해 멘토링, 대출, 펀딩, 컨설팅을 돕는 원스톱 솔루션 제공.
  - 세금면제제도를 통해 신규 기업 설립 장려
- 정부의 일관된 규제정책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선순환 촉진
  - 혁신 스타트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 불확실성이 적으며 한번 정한 정책은 꾸준히 유지함.
  - 드론 관련 정책이 대표적으로 아시아 최초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할 때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후 추진

### ③ 인도

- 젊은이들이 취업보다 창업을 더 좋아하는 나라로 △연 5% 이상 성장, △13억 5000만 인구의 풍부한 내수시장, △30대 이하 젊은 층이 50% 이상이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산업기반 시설과 일자리는 부족
-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IT 기술 분야 경쟁력이 높으며, 미 실리콘밸리에 비해 인건비가 4배나 싼데도 우수한 엔지니어 등 인적자원이 풍부
- 2014년 모디 총리가 독립 69주년 기념일에 언급한 ‘스타트업 인디아’를 시작으로 스타트업을 집중육성,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늘릴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

- 젊은이들에 기업가정신을 장려하기 위해 ‘스타트업 인디아’를 적극 홍보,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불완전한 R&D 환경, 세제 등 복잡한 규제 완화에 초점
  - 3년간 법인세 면제, 특허등록세 80% 감면 등 투자 인센티브 제공
  - 지방정부 간 스타트업 지원 경쟁체제 도입
- 모디의 ‘스타트업 인디아’ 구상 덕에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전개, 현재 인도는 가장 빠른 성장세 보이고 있으며 2030년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

## 2] 서유럽

### ① 프랑스

-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정권과 관계없이 10년 넘게 꾸준히 이어온 스타트업 육성정책
  - 2008년 전 세계가 금융위기로 실업률이 높아지자, 우파 정권이었던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매출이 없으면 사회보장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며 실직자, 학생, 퇴직자들에게 규제를 완화하며 창업을 유도
  - 이어 집권한 좌파정권 올랑드 정부도 ‘라 프렌치 테크’ 제도를 선보이며 이전 정권의 ‘마이크로 기업제도’를 확대해 누구나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
  - 현 마크롱 정부는 실업자가 창업을 하면 수익이 날 때까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프랑스 전역에 직원 10인 이하, 연매출 200만 유로 이하인 ‘마이크로 기업’ 100만개 이상 탄생
- 2018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의 49%가 “마이크로 기업 창업에 관심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35세 미만 창업 비율이 57%에 달하는 등 청년창업이 활성화

## ② 영국

- 금융위기 이후 런던 빈민지역을 영국판 실리콘밸리 ‘테크시티(Tech City)’로 만들면서 스타트업 육성정책 시작
  - 런던 도심과 불과 10분 거리이지만 임대료가 저렴한 빈민지역에 창업자들이 모여든 것을 영국정부가 주목, 이후 2010년 캐머런 총리가 ‘테크시티 조성안’을 발표
- 2011년 출범 당시 약 100개였던 입주기업이 최근에는 5,000여개가 넘어서는 등 성장세가 뚜렷
  - 테크시티는 구글·아마존·인텔 등 글로벌기업과 수천개의 스타트업이 모이는 지역으로 이세돌 9단과 세기의 대결을 펼친 알파고(AI)를 만든 스타트업 기업 ‘딥마인드’(DeepMind)도 이곳에서 탄생
- 테크시티가 명실상부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성장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음
  - △창업에 관한 모든 행정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창업 절차 간소화’, △무일푼으로도 창업이 가능한 ‘자본금 제한 철폐’, △‘자유로운 설립과 폐업’ 등이 원동력 등

## ③ 북유럽

### ① 스웨덴

- 인구 1,000만 명에 연간 창업기업 수가 7만여 개에 달하는 나라
  - 선진화된 복지제도가 스타트업 성장의 기반. 창업에 실패해도 사회안전망인 복지제도가 마련돼 있어 창업의 증폭제 역할
  - 발명자의 특허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대학교수의 산업체 겸직과 파견 근무 허용 및 대학 창업이 용이

- 특히, 창업 초기부터 내수보다 글로벌시장을 공략해 볼보, 이케아, H&M 등 세계적 브랜드가 탄생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스타트업 성장의 토대
  - 1990년 이전 공기업들의 시장독점으로 규제가 심했으나, 각종 규제 완화로 신생기업이 기존 대기업과 경쟁하기가 쉬운 환경 조성
  - 외국 기업들도 스타트업 인수합병을 할 수 있게 함
- 법인세도 (1991년) 30% → (2020년) 22%로 낮춰 소규모 창업기업들의 세부담을 대폭 줄였고, 2000년에는 상속세 및 부유세를 없애 여유자금이 있는 부자들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② 덴마크

- 2008년 금융위기 당시 1년 사이에 3,500여개 이상 기업이 도산, 정부는 3년간 매출 또는 근로자 수가 매년 20% 이상 증가한 '성장형 기업'에 집중 지원
  - 정부는 스타트업 육성 및 기업가정신 확산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
  - 대학 8곳이 모두 국립대라는 점을 활용해 대학생 창업을 적극 지원. 대학 연구 성과를 상품화할 수 있도록 대학-기업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창업 생태계 토양 조성
- 든든한 복지제도 및 유연한 노동시장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기반
  - 고용주가 노동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지만 실직해도 최소 2년간 실업급여를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창업에 도전하기 쉬움
  - 진로 변경 등 자발적 실업도 많으며, 1년에 노동자 4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옮길 만큼 이직도 잦음



- 직업 간 소득 격차가 적고 학력으로 차별을 받지 않는 문화도 한 몫
  - 높은 소득세율로 소득이 많은 직종이 더 많은 세금을 내 직업 간 소득 격차가 작으며,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대학진학률이 40% 정도
  - 기술직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과정 실습으로만 진행되는 기술학교로 진학,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으면 높은 소득이 보장되며 사회적으로도 인정 받는 풍토

#### 4] 미국, 이스라엘

##### ① 미국

- 미국은 '실리콘밸리'로 대변되는 세계 1위의 스타트업 천국
- 2011년 오바마 행정부가 '스타트업 아메리카'라는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며 자금지원, 세제혜택 등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했으며,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혁신국'을 신설해 규제·절차 개선
  -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벤처캐피털 투자가 2013년 36.4억 달러에서 2018년 99.5억 달러로 173.4% 증가
- 글로벌 IT 기업들이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비영리단체 통해 멘토링과 교육을 제공, 스타트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 형성
  - 2012~2016년, 미국 5대 IT기업 구글, MS, IBM, 애플, 아마존이 스타트업 420개에 투자. 특히, 구글은 79.3%인 333개 기업에 투자해 우버 등 22개의 유니콘 기업을 육성

##### ② 이스라엘

- 실패를 용인하고 존중하는 '다브카(Davca)' 문화를 스타트업 창업에 적용, 이스라엘은 '종교성지'에서 '창업성지'로 떠오르고 있음

- ※ 히브리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의 다브카는 “실패해도 괜찮으니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하라”는 뜻으로 청년들은 도전하고, 책임은 사회가 진다는 것
- 이스라엘은 창업을 개인의 영리 추구보다는 공공 발전의 성격으로 인식, 실패와 시행착오에 대해 비난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음
- 창업지원으로 생겨나는 스타트업은 매년 1,000개로 이 중 2%만 성공. 정부, 요즈마펀드 등은 실패한 98%의 창업자 지원 재원을 별도로 관리해 실패하기 전보다 20% 이상의 추가 지원을 제공
- 실패한 창업자에게 첫 창업 때보다 더 많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과 자금을 지원, 실패한 경험이 있기에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
  - ※ 요즈마펀드(Yozma Fund): 벤처캐피탈 자금 공급을 위해 이스라엘 정부(40%)와 민간(60%)이 공동 출범한 펀드로 1993년 출범, 이후 민간으로 최종 이관
- 한 개의 스타트업 기업을 빨리 키워서 적당한 가격에 팔고, 이를 기반으로 또 다른 사업에 도전하는 방식의 ‘연쇄창업’을 활성화
- 주로 첫 번째 사업에서 경험을 쌓고 두 번째, 세 번째 사업에 올인
- 창업부터 엑시트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약 4년 반으로 엑시트 기간 비교적 짧음
- 빠른 엑시트는 결국 활발한 재창업으로 이어져 엔젤투자, 벤처캐피탈 등 견고한 투자 생태계 성장기반이 조성.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엑시트까지 보통 약 10년 소요

###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① 주요국 스타트업 지원전략 요약

- 전 세계는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의 방안으로 △규제완화, △금융지원, △세제혜택 등에 집중
  - (규제완화) △창업절차 온라인화 등 행정간소화, △자본금 제한 철폐 (영국), △무인자동차 관련 법 제정(싱가포르) 등
  - (금융지원) △해당 기업에 지원한 민간자본에 매칭해 투자(미국), △기금 조성해 VC에 지원(중국), △EU 및 역내국가의 기금을 통한 지원(EU) 등
  - (세제혜택) △스타트업 투자한 주식 5년 이상 보유시 자본이득세 영구면제(미국), △낮은 법인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면제(EU), △개인투자자 투자액의 70% 세금면제(중국) 등
  - 특히, 미국과 중국처럼 민간투자가 활성화된 국가일수록 창업환경 개선과 멘토링에, EU와 같이 민간투자가 부족한 경우 정부의 정책 자금지원에 중점을 둠

#### ② 정책적 시사점

- 스타트업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필요
  - (중국) 알리바바 마윈이 창업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
  - (이스라엘) 실패 경험을 재창업의 기회로 생각하고 존중하는 '다브카

(Davca)' 문화 도입, 창업 실패 후 재창업시 추가적인 지원

- (덴마크) 기업가정신 확산을 국가전략으로 추진
- (프랑스) 창업 수익 발생 시까지 실업수당 지급

○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위해 민간자본 유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민간자본 투자 유인방식 다각화 필요
- VC 및 엔젤투자자와 동일한 금액 정부 투자하는 매칭 지원
- 스타트업 투자자 대상 세금감면, 스타트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세금감면 혜택 강화

○ 정부정책 자금지원보다 국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함께 글로벌 VC와 글로벌 IT기업 투자자의 국내 유인을 위한 노력 절실

- 글로벌VC를 통한 투자유치는 국내 스타트업의 기업가치를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글로벌마켓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현재 10년 걸리는 엑시트 기간을 단축하고 재창업 함으로써 성공 창업 경험의 선순환 유도

### Ⅲ. 음식배달 라이더 현황 및 업계 건의 사항

작성: 이영주 라이더유니온 정책국장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배달 확산으로 외식업과 음식배달업의 성장<sup>1)</sup>은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음식을 배달하는 라이더들은 열악한 처우와 사고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음. 고용형태 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위로 인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전반의 미비로 인해 유상운송보험 역시 가입하기 힘든 상태임. 이에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및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정비 등 적극적 보호 정책이 필요함

#### 1. 배달 라이더<sup>2)</sup>의 현황

##### □ 음식 배달산업의 가파른 성장

- 통계청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조사에 따르면 외식산업의 규모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배달산업도 빠르게 성장
  - 음식점업 규모는 2006년 42만 개에서 2017년에는 50만 개로 2006년 대비 18.1% 증가. 음식점업 종사자는 2006년 117만 명에서 2017년 157만 명으로 크게 증가(34.1%)
- 외식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음식배달산업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등에서 음식배달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황과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 또한 미흡한 실정

1) 2019년 오토바이 배달원의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출범, 현재 400명 회원이 활동  
<https://riderunion.org/home>

2)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이용, 음식을 배달하는 노동자를 지칭하나 정확한 법적 규정 없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운수 및 창고업 中 ‘늘찬 배달업’을 통해 음식배달 라이더를 포함하는 배달종사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나 라이더만의 구체적 현황은 별도 집계되지 않고 있음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비대면 배달 문화 확산으로 음식 배달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

## □ 배달 라이더의 규모 및 실태

○ 배달 라이더의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는 상황

- 직접고용: 배달 라이더의 고용 형태는 음식점,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 등이 근로자로 직접 고용한 경우
- 배달대행업체(부릉 등): 배달대행업체 등이 위탁·도급계약 등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계약한 경우
- 배달앱(배민 등) 고용: 배달앱을 통해 불규칙적·간헐적으로 일거리를 구하는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등이 있음
- 2019년 연구<sup>3)</sup>는 전국의 배달대행기사 수를 약 2만 명에서 3만 명 사이일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배달대행업체 이외의 고용형태 증가, 코로나19의 영향 등을 고려하면 전체 라이더의 규모는 현재 1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음

○ 최근 조사<sup>4)</sup>에 따르면, 배달 라이더는 97.1%가 남성, 평균 연령은 35.1세(전체의 87.9%가 20~40대), 근속기간은 4.3년. 배달업을 주업

3) 배달업 종사자 현황 실태파악 및 보호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9.10.

4) 배달노동자 노동환경 실태분석, 정흥준 교수(서울과기대), 2020.11.

으로 하는 이는 84.8%. 이 중 “다른 일은 하지 않고 배달 일만 한다”는 응답이 74.4%로 상당수가 배달노동을 단기 아르바이트가 아닌 생업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에 응답한 전업 배달 라이더들의 월평균 수입은 256만 5천원. 1주 평균 근무일수는 5.6일이며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9.6시간(시간당 약 11,900원)
  -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은 오토바이렌트료 + 기름값 + 보험료 + 배달앱 수수료 및 세금이 지출되며 대부분의 라이더 수입은 200만원 수준임<sup>5)</sup>
  - 지역마다 배달 수수료 편차가 크기 때문에 상당수 라이더가 장시간 근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조차 벌지 못하고 있는 상황

## 2. 배달 라이더가 겪는 문제점

### □ 높은 사고 위험

- 배달 라이더 교통사고만을 별도로 집계한 통계는 없으며, 경찰청의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현황과 산업재해 사고재해자 통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현황을 추정하고 있음
  - 최근 음식배달 산업의 급격한 성장을 감안할 때 전문가들은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중 배달 라이더 사고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측
- 2020년 상반기(1~6월)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대비 13.7%가 증가한 265명(2019년 233명)

5) KBS 김경래 최강시사, 이병환 씨(라이더 유니온, 배민라이더스) 인터뷰 2020.11.11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이륜차 교통사고는 3만 5,306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중 16.2%를 차지
- 같은 기간 이륜차 교통사고에 따른 연평균 사망자는 812명, 19.9%로 사고건수에 비해 사망자 발생 비중이 높음
- 이륜차 가해사고로 연평균 보행자 31명 사망, 3,630명 부상

〈표 III-1〉 전체 교통사고 대비 이륜차 사고현황

구분	교통사고(건)		사망자(명)		부상자(명)	
	전체사고	이륜차(%)	전체사고	이륜차(%)	전체사고	이륜차(%)
평균	218,133	35,306(16.2)	4,086	812(19.9)	325,862	36,871(11.3)
2018	217,148	34,008(15.7)	3,781	739(19.5)	323,037	35,394(11.0)
2017	216,335	35,328(16.3)	4,185	819(19.6)	322,829	36,908(11.4)
2016	220,917	36,581(16.6)	4,292	878(20.5)	331,720	38,311(11.5)

주: 이륜차 가해사고로 인해 연간 보행자 31명 사망, 3,630명이 부상

- 배달 라이더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서는 라이더의 난폭·과속 운전과 교통신호 위반, 인도 주행 등이 꼽히고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열악한 수익구조

[참고] AI 알고리즘 배달시간 압박 관련 언론 보도

- “배달 거리 25분, AI 배차 앱은 산 뚫고 12분 만에 가라고 한다” (한국일보 2020.11.3.)
- “차 막히고 길 없는데… 거절도 못하는 AI 배차” (경향신문 2020.11.3.)
- 배달 라이더들 “사심 없었는데 먼 곳 배차… 인공지능이 더 힘들어” (한겨레 2020.11.3.)

- 급증하고 있는 배달 라이더의 교통사고는 라이더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 운전자, 보행자에게도 치명적인 위험이 되므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임



□ 낮은 산재보험 가입률<sup>6)</sup>

- 배달 라이더 중 대부분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지만,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전속성<sup>7)</sup>이 필요하고, 적용 제외 신청 제도로 인해 실제 가입률은 높지 않음

□ 유상운송보험 가입 곤란

-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 좁은 보상 범위, 잦은 인수거절로 인해 유상운송 보험 미가입 혹은 가정용·여가용 보험 가입 상태로 운행하는 라이더의 비율이 높아 사고 발생시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음

### 3. 배달라이더 업계 건의 사항

□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 전속성 폐지

-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가입 조건으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전속성)”을 요구하고 있음. 2007년 입법 당시 산재보험료 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징수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취지였으나, 노무 제공 관련 데이터가 모두 축적되어 확인가능한 현재의 플랫폼 노동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음

6) 음식배달 라이더에 대한 별도 통계는 없으며, 퀵서비스 기사 직종으로 추출

7) 전속성은 업무상 하나의 사업체에 속한 정도로 산재보험 적용 받으려면 소득의 절반 이상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해야 함

- 상기 조사의 대상 중 84.8%가 1개의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한다고 응답. 다수 사용자가 아닌 특정 사용자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어 전속성을 충족한다는 의미
- 실무상으로는 더 나아가 배민커넥터, 쿠팡이츠와 같은 클라우드소싱형 배달 라이더에게도 전속성을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고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배달업종 분과위원회가 2020년 9월 16일 체결한 배달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합의에서도 전속성 제도 자체의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

#### ○ 적용제외 신청 폐지

- 국민의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에 대한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함
- 2011년 한나라당 당론 발의(이주영 정책위의장) 이후 2012년 대통령 후보 공약 및 2013 국정과제, 2014년 새누리당 주도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 □ 유상운송보험 정책 개선

- 보험료 현실화 및 보상 범위 확대로 유상운송보험 가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이륜자동차 공인 정비자격 신설 및 표준공임 도입 등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전반의 정비와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음

## □ 안전배달료 도입 검토

- 신호 위반과 난폭 운전, 사고 위험의 근본적 원인은 낮은 배달료임. 배달 건수가 수입으로 직결되는 구조 속에서 안전 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배달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하도록 규정
- 소비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안전배달료 도입 논의를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음

## □ 배달앱 알고리즘 공개 및 개선

- 무리하게 짧은 배달시간을 산정하고 준수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암시함으로써 배달 라이더를 압박하여 치명적 사고 위험으로 내몰지 못하도록 배달앱의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배달앱의 라이더 처우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지원

-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2개 플랫폼이 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배민의 경우 2019년에는 2015년 495억원과 비교해 11배 성장한 5,654억의 폭풍 성장 매출의 이면에는 배달라이더의 목숨을 건 배달이 있었음
- 이에 배달라이더를 상생 파트너로 인식하고 안전 지원과 공동 성장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함

## 이슈브리프 목록 (최근 발간순, 2019.2.14.~現在)

### 이슈브리프 2020-13 (발간일: 2020.11.12)

- ▶ 2020 美 대선 결과분석: 평가, 전망, 대응 ▶ 공시가 현실화의 문제점과 정책 제언
- ▶ 임대차2법發 전월세대란: 최근 동향과 정책과제

### 이슈브리프 2020-12 (발간일: 2020.10.29)

- ▶ 노동시장 관련 최근 논점과 개혁방향 ▶ 정당성을 상실한 文정부 탈원전 정책과 시사점
- ▶ 코로나19에 따른 여행관광업계 피해 현황 및 시사점

### 이슈브리프 2020-11 (발간일: 2020.10.15)

- ▶ 실효성 중심의 재정준칙과 재정감독원 도입 제안 ▶ 북한 암호화폐 절취 실태와 정부 대응의 문제점
- ▶ 부동산 과세강화의 문제점 진단 및 시사점 ▶ 초고령사회 대비 주택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방안

### 이슈브리프 2020-10 (발간일: 2020.9.28)

- ▶ 전월세전환율 2.5% 강제인하의 타당성 검토 ▶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의 유통정책 제언
- ▶ 포털 Si알고리즘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 이슈브리프 2020-09 (발간일: 2020.9.17)

- ▶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와 정책방향 ▶ 코로나19, 중소기업 생존·도약을 위한 정책제언
- ▶ 코로나19, 국내외 육아보육 정책 검토 및 시사점

### 이슈브리프 2020-08 (발간일: 2020.8.13)

- ▶ 최저임금 수준, 중위임금 60%로 제도화 ▶ 해외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일가정양립정책' 방향
- ▶ 아동학대범죄 현황과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제안

### 이슈브리프 2020-07 (발간일: 2020.7.23)

- ▶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분석 ▶ 2020 美 대선 판세분석과 향후 대응방안
- ▶ 코로나19에 따른 문화예술인 피해 현황 및 시사점

### 이슈브리프 2020-06 (발간일: 2020.6.25)

- ▶ 약화로 국가재정, 재정건전성 회복 시급 ▶ 데이터청 설립을 위한 현안과 과제
- ▶ '남북 공동선언' 재검토와 과제: '6·15선언'을 중심으로

### 이슈브리프 2020-05 (발간일: 2020.5.28)

- ▶ '전국민 고용보험제' 우파적 대안 모색 시급 ▶ '김정은 신변이상설': 대응과 후속조치의 문제점
- ▶ 영국 보수당의 장수 비결과 시사점

### 이슈브리프 2020-04 (발간일: 2020.4.2)

- ▶ 역대 총선에서의 사전 여론조사의 문제점과 시사점 ▶ 文정권 정책평가와 국정지지도 비교 및 상관관계 분석
- ▶ 'n번방' 사태: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해외사례 검토 ▶ 신종 코로나 충격의 고용감소 추정과 시사점

### 이슈브리프 2020-03 (발간일: 2020.3.12)

- ▶ 신종코로나의 경제쇼크, 정부대응과 시사점 ▶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속 북한: "바로 보기"
- ▶ 포털의 댓글과 실시간검색어 폐지: 의미와 과제

**이슈브리프 2020-02** (발간일: 2020.2.13)

- ▶ 문재인 정권의 '국민기반' Top 10 ▶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세대상생형 주거정책 방향
- ▶ 대한민국 2040년: 정치인재 양성과 한국당의 과제

**이슈브리프 2020-01** (발간일: 2020.1.16)

- ▶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대한 당의 대응방향 ▶ 최근 美-이란간 충돌 관련: 현황, 파장, 전망
- ▶ 2030 사로잡은 美·日 청년보수정치 사례분석 ▶ 소상공인기본법 통과 의의와 향후 과제

**이슈브리프 2019-11** (발간일: 2019.12.19)

- ▶ '초슈퍼' 예산과 '초미니' 재정승수 ▶ 2019 핑수 열풍의 사회적 의미와 교훈
- ▶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의 쟁점과 대응방향

**이슈브리프 2019-10** (발간일: 2019.11.21)

- ▶ 탈북자 강제복송: 흔들린 원칙, 상처받은 국격(國格)
- ▶ 공유모빌리티 '타다' 관련 쟁점 및 시사점 검토 ▶ 위험적이며 정치적인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이슈브리프 2019-09** (발간일: 2019.10.31)

- ▶ 공수처, 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악(改惡)' ▶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
- ▶ 점증하는 장기 복합불황 공포

**이슈브리프 2019-08** (발간일: 2019.10.10)

- ▶ 文정부 '역대 최고 고용률'의 실상과 대책 ▶ 북한의 SLBM 시험발사: 의도, 평가, 전망
- ▶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제도마련 필요성

**이슈브리프 2019-07** (발간일: 2019.9.19)

- ▶ 미국發 '한-일 핵무장론' 대두: 쟁점과 대책 ▶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비해야
- ▶ 국민연금 재정위험과 개편방안

**이슈브리프 2019-06** (발간일: 2019.8.29)

-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배경, 의도, 파장 ▶ '강대강' 대응으로 일본 수출규제 고착화 우려
- ▶ 확대되는 1인 가구와 보수주의 가족가치

**이슈브리프 2019-05** (발간일: 2019.3.14)

- ▶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 유튜브 '슈퍼챗' 논란, 정치자금법의 한계와 시사점
- ▶ (현안보고) 베트남 미북회담 '노딜': 원인, 평가, 전망

**이슈브리프 2019-04** (발간일: 2019.2.28)

- ▶ 궤변으로 덮을 수 없는 최저임금 급등의 부작용 ▶ 사용자 제로, 제로페이
- ▶ 자치경찰제, 성급한 도입으로 인한 실패 우려 ▶ (현안보고) 2차 미북정상회담 전망: 쟁점과 대책

**이슈브리프 2019-03** (발간일: 2019.2.14)

- ▶ 노인연령 기준 상향 논의의 출발점은 일자리 창출 ▶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해야 할 다섯 가지 이유
- ▶ 드라마 <SKY캐슬>을 통해 본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 ▶ (현안보고) 팩트로 본 문재인 정부 20개월 경제 성적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필패(必敗) 경고음"





---

여의도연구원은 각종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을 담은  
〈이슈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